



KOTRA 워싱턴 D.C. 경제통상 브리핑은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매주 2회(화/목) 배포합니다.



워싱턴 D.C. 경제통상 브리핑

주요 내용

워싱턴 D.C. 포커스

- (관세) 미국 연방 대법원 IEEPA 재판 결과 전망 및 파급효과 2
- 대법원 위헌 결정 시, 미국 정부가 환급하게 될 관세는 1,000억 달러에 이를 전망

W 경제통상 동향

- (무역협정) 미·일 공동 투자 지원사업 발표…구체적 실행계획 제출·최종 승인 필요 5
 - (통상) 미국 자동차노조, USMCA 관련 북미 수입쿼터 신설·생산 확대 요구 6
 - (대중견제) 미·중 경제안보 위원회, 단일 통합 경제안보기관 신설 권고 7

법안 동향

- 반도체, 윤송 등 하원 법안 3건 8

 이시각 헤드라인

- | | |
|---------------------------|----|
| •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 9 |
| • 워싱턴 D.C. 무역관 공지사항 | 10 |

월상년 D.C. 주요일정

11.19(수)	• 10월 연준 이사회 FOMC 회의록(Minutes of Fed's October FOMC meeting)
11.20(목)	• 9월 미국 고용 보고서(U.S. employment report [delayed report])
11.21(금)	• 11월 소비자 심리(최종)(Consumer sentiment (final))
11.25(화)	• 11월 소비자 신뢰도(Consumer confidence)

(관세) 미국 연방 대법원 IEEPA 재판 시나리오 전망 및 파급효과

1. IEEPA 관세 재판 동향 및 주요 쟁점

□ 연방 대법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 위헌성 판단

- 하급심의 잇따른 IEEPA 관세 무효 판결에 따라, 대법원은 최종심 진행 중
 - ('25.5.28) 연방 국제무역법원(CIT)은 행정부가 국가 경제 비상 상황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대통령 권한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결¹⁾
 - * 해당 관세에는 불법 이민 및 펜타닐 문제로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관세(2월) 및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4월)가 포함
 - ('25.8.29)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IEEPA는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관세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라며 1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 선고²⁾
 - ('25.9.6) 대법원은 본 시안을 신속 심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10.30까지 정부(피고)와 원고 측의 서면 제출 접수³⁾를 완료함.

□ 연방 대법원, 11.5(수) 공개 변론(Oral Argument) 진행

- 보수 성향 대법관이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음에도, 공개 변론 과정에서 복수의 대법관이 행정부 관세부과 권한 범위에 대해 우려와 의문 표명
 - 이에,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해당 관세 위헌 판단 가능성은 신중히 제기
- 대법원 공개 변론에서 제기된 핵심 쟁점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됨.
 - (1) 대통령 권한의 한계 :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권한까지 포괄 위임했는지 여부
 - (2) 라이선스 수수료(License Fee)의 법적 성격 : 정부는 IEEPA가 허용한 ‘수입 규제’(regulate importation)의 일환으로 라이선스 수수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주장
 - * 즉, 관세를 세금이 아닌 라이선스 수수료의 형태로 재구성해 합법적 수입 규제로 정당화하려는 시도

1) https://www.cit.uscourts.gov/sites/cit/files/25-66.pdf?utm_source=chatgpt.com

2) https://www.cafc.uscourts.gov/opinions-orders/25-1812.OPINION.8-29-2025_2566151.pdf?utm_source=chatgpt.com

3) <https://www.supremecourt.gov/Search.aspx?FileName=/docket/docketfiles/html/public/24-1287.html>

- (3) 형식 vs. 실질 : 다수의 대법관은 '라이선스 수수료'를 형식상 '수입 규제'로 볼 수 있으나, 그 경제적 효과는 사실상 관세와 동일하다는 점을 지적

〈연방 대법원 IEEPA 관세 재판 경과 요약〉

일자	단계	주요 내용
'25.5.28	1심 (국제무역법원 판결)	대통령의 IEEPA 근거 관세부과가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 (exceeded authority)고 판결
'25.8.29	2심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재확인. 단, 정부의 상고를 위해 판결 효력 잠정 유예(stay)
'25.9.9	대법원 상고 수리 (Certiorari Granted)	대법원이 사건 심리 개시 결정. 대통령의 긴급 경제 권한의 한계를 다투는 헌법적 사안으로 격상
'25.10.30	서면 제출 기한 (Brief Filing Deadline)	양측(정부 및 원고)의 최종 브리핑 제출 마감
'25.11.5	구두 변론 (Oral Argument)	정부와 원고 측 법률팀이 대법관 앞에서 직접 변론
'25.12~ '26.초	최종 판결 (Decision)	연내 또는 2026년 초 대법원 최종 판결 발표 가능성 높음.

[자료] 법원 판결문 및 언론 보도 자료 취합

2. 판결 전망 및 파급효과

□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 불가피 전망

- (시나리오 1) IEEPA 기반 관세부과 권한을 인정하는 경우
 - 행정부의 무역통상 재량 대폭 확대. 향후 의회의 견제 없이 신속하고 과감한 관세 조치 실행 가능 ⇒ 기업에 관세 부담 증가와 정책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 심화
- (시나리오 2) IEEPA 기반관세 권한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 IEEPA에 근거한 대통령의 관세부과 권한을 인정하되, 절차적·형식적 요건을 추가하거나, 의회에 대한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식으로 판결 가능성 ⇒ 기업들은 향후 관세 적용 범위, 부과 수준, 신규 절차 변화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
- (시나리오 3) 혼합 또는 분할 결정(Mixed and Split Outcome)
 - 대통령의 국가 비상 상황 선언과 직결된 관세는 유지하되, 상호관세와 같이 국가 안보와 연계성이 약한 조치는 무효화 가능성 ⇒ 정책 해석의 불확실성 지속으로, 기업의 공급망 운영과 관세 부담 리스크 확대 전망

• (시나리오 4) IEEPA 기반 행정부의 관세부과 권한 전면 기각

- IEEPA 관세 전면 무효화에 따라, 정부는 다른 법률에 기반한 무역 구제 수단 활용 예상 ⇒ 수입업체는 기지급한 관세를 환급받는 기회 확보 가능성

□ IEEPA 관세 위헌 결정 시 관세 환급 파급효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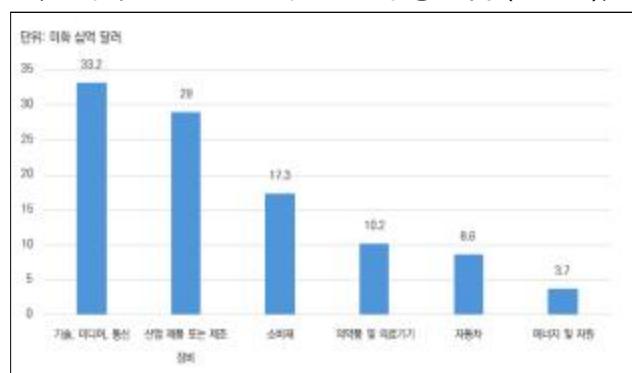
- 10월 기준 정부가 IEEPA 기반 관세로 거둔 총세입은 1,080억 달러로 추산⁴⁾
 - 이중 대중 관세 수입이 약 340억 달러로 최다. 멕시코 62억 달러, 캐나다 22억 달러 등 순. 여타 국가 대상 상호관세 수입은 640억 달러 상당 추정
 -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대법원의 IEEPA 관세 위헌 결정으로 “미국이易게 될 관세 수입과 투자는 총 2조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⁵⁾
- 산업별로는 기술미디어·통신 분야가 지급한 관세가 332억 달러로 가장 크고, △산업 제품 또는 제조 장비(290억 달러) △소비재(173억 달러) △의약품 및 의료기기(102억 달러), △자동차(86억 달러) 등 순
- 대법원의 IEEPA 기반 관세 환급이 결정되면, 수입업체, 부품 협력업체, OEM 기업 등 해당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 예상

〈잠재적 IEEPA 관세 환급 추정 액수(주요국)〉

국가	관세(9.23 기준)	관세(10.31 기준 추정)
기타국가	516억	640억
중국(홍콩)	289억	342억
멕시코	57억	62억
캐나다	20억	22억
브라질	2.9억	6.3억
인도	2.7억	4.9억
일본	2.0억	3.6억
합계	890억	1,080억

[자료] 미국 세관⁶⁾, PWC⁷⁾

〈잠재적 IEEPA 관세 환급 추정 액수(산업별)〉



[자료] PWC

- | | |
|-------|-----------------|
| ▪ 작성자 | 워싱턴 D.C.무역관 이정민 |
| ▪ 자료원 | 각주 참고 |

4) <https://www.pwc.com/us/en/services/tax/library/pwc-ieepa-tariffs-understanding-potential-outcomes-ahead-of-the-supreme-court-ruling.html>

5) <https://truthsocial.com/@realDonaldTrump/posts/115527159095475127>

6) <https://www.cbp.gov/newsroom/stats/trade>

7) <https://www.pwc.com/us/en/services/tax/library/pwc-ieepa-tariffs-understanding-potential-outcomes-ahead-of-the-supreme-court-ruling.htm>



(무역협정) 미·일 공동 투자 지원사업 발표…구체적 실행계획 제출·최종 승인 필요

- (개요) 미·일 5,500억 달러 규모 공동 투자펀드에 따른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필요
 - 미·일 무역협정에 따른 5,500억 달러 핵심 산업별 공동 투자펀드 사업 명단이 발표*됨에 따라 선정 기업의 구체적 세부 실행계획 제출 및 대통령 승인 필요
 - * 투자펀드는 15개 이상의 기업 반도체, 제약, 금속, 중요 광물, 조선, 에너지,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등 전략적 핵심 분야에 집중, 일본은 투자·융자의 형태로 지원할 예정
 - 5,500억 달러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인 '28년까지 투입될 예정으로 자금 집행을 위해 선정 기업은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계획 제출 필수
- (상세) 선정된 투자 프로젝트는 단계별 심사·대통령 승인 후 최종 자금 집행 가능
 - 투자 후보*로 선정된 기업들은 세부 계획, 위치, 주주 등의 등 구체적 정보를 투자 위원회(Investment Committee)와 양국 자문위원회(Consulting Committee)에 제출
 - * 투자는 도시바, 히타치 등 일본 대기업과 베크텔, 키워 등 미국 기업 포함 15개 이상의 기업에 할당
 - 심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만 실질적인 자금 집행 가능
 - 미국 상무부 산하 신설 부서인 투자 유치 전담부서(Investment Accelerator)가 해당 기업별로 자금의 집행, 모니터링과 동시에 규제 완화 지원 등 실무를 전담
- (쟁점) 투자 수익에 대한 법률적 해석, 정치·행정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 존재
 - 트럼프 행정부는 금융·정책·외교적 지원을 약속하며 추진 의지를 강조했으나, 투자액이 가장 많은 원자력 프로젝트(약 3,320억 달러)는 광범위한 규제, 고비용 역사적으로 낮은 수익성 등 전형적인 장애물에 직면
 - 투자 합의서의 △불분명한 일본 정부의 수익 구조나 관여 방식, △미국 정부의 이익 배분, 적법성 등 법률적 해석, △차기 행정부의 정책 변경 가능성 등이 쟁점으로 부각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문현주
▪ 자료원	폴리티코(11.18)

(통상) 미국 자동차노조, USMCA 관련 북미 수입쿼터 신설·생산 확대 요구

- (개요) 미국자동차노조(UAW), 북미 자동차 수입쿼터 신설 등 통상 개편 요구
 - 자동차노조(UAW)는 2026년 USMCA(미-멕시코-캐나다 협정) 의무 재검토를 앞두고 무역대표부(USTR)에 수입쿼터 도입 등 대규모 정책 변화 요구안 제출
 - 현행 USMCA를 크게 비판하며, 현 행정명령 및 관세보다 강력한 수입쿼터 규제를 통해 미국 내 최종 조립 및 부품 생산 비중 확대 주장
- (상세) 완성차-주요부품-전체부품 3종 수입쿼터 및 국내 생산 확대 방안 요구
 - 미국 시장 내 연간 생산 목표를 2024년 1,000만 대에서 1,600만 대로 상향 설정, 4년간 단계적으로 국내 생산만으로 자급률 100% 달성을 목표 제시(2029년 5월까지)
 - 완성차, 핵심 부품(엔진·변속기), 전체 부품을 각기 별도 수입쿼터로 규제하고, 자동차 뿐만 아니라 항공·건설장비·대형가전·반도체 등 전략 품목에도 확대 적용 요구
 - 미국 판매대수 대비 생산비율 1:1 실현이 목표이며, 이 경우 신규 조립공장 최소 12개 신설과 부품 산업 관련 종사자 수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 UAW 측은 “일본·한국·독일과 동등 대우, 멕시코 근로자 임금·권리 향상” 등 요구, 현지는 이번 논의 결과가 교역 주요국과의 향후 통상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

- | | |
|-------|---|
| ■ 작성자 | 워싱턴 D.C. 무역관 김준희 |
| ■ 자료원 | 폴리티코(11.15), 하원 labor caucus (11.3) |
-

(대중견제) 미·중 경제안보 위원회, 단일 통합 경제안보기관 신설 권고

- (개요) 美 여러 기관에 위임된 수출통제·제제 책임, 단일 기관 신설로 통합 권고

- 미·중 경제안보 위원회*는 최근 의회보고서에서 새로운 단일 통합 수출통제 기관 설립 촉구

- * 美-中 간 무역 및 안보 관계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 입법부와 행정부에 권고를 제공하기 위해 2000년 美 의회에 의해 설립된 의회 자문 기구로 매년 보고서를 통해 정책 권고

- 현재 수출통제 규정과 제재에 대한 책임이 국무부·상무부·재무부 등으로 분산되어,* 위원회는 하나의 통합 경제외교 기관을 통해 중국의 통제 규정·제제 회피전략에 대한 대응 권고

- * 국무부는 군수품 수출, 상무부는 이중 용도 기술과 상업 기술, 재무부는 금융 제재 관리

- (상세) 中의 수출통제·제제 회피전략 방지 및 첨단 기술 접근 차단 목적

- 미·중 경제안보 위원회는 중국이 수출통제·제재를 성공적으로 회피하여 미국의 첨단 기술 접근 차단에 실패했다고 분석

- 또한, 새로 신설된 기관에 中 회피 네트워크 실시간 정보 접근 권한, 공급망 추적 및 준수 검증, 협력 기관과 조율을 위한 인력 및 자원 제공 강조

- 기존 수출통제 및 제재 담당 기관인 산업안보국(BIS), 해외자산통제국(OFAC), 국제안보·비확산국(ISN), 국방기술보안청(DTSA)을 통합, 국가안보 정책 집행 강화

- (반응) 첨단 기술 유출 막을 것으로 기대, 일부 전문가는 구조적 한계 지적

- 전문가들은 첨단 기술의 중국 유출 차단과 미국 기술 우위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

- 신설된 단일 통합 경제안보기관이 기존의 구조적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을 제시하며 기관 간 이해 상충 문제를 관료 조직 재편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

- 일부 전문가는 새로운 기관 설립은 수년 소요가 예상되어 단기 조치로는 산업 안보국(BIS) 기능 강화 등 단기 조치가 우선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김기범
-------	------------------

▪ 자료원	폴리티코(11.18), 인사이트(11.18), SCMP(11.18)
-------	---

국회법안 동향

구분 (현행일)	법안 (발의일)	대표 발의자	법안 및 주요 내용
반도체 (11.17)	H.R. 6055 (하) (11.17)	Brian K. Fitzpatrick (공)	<p>〈핵심 제조 및 산업(SEMI) 투자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rengthening Essential Manufacturing and Industrial (SEMI) Investment Act ▪ 1986년 내국세법을 개정해 첨단 제조업 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하고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소재를 포함시키기 위한 법안 ▪ 반도체법(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CHIPS) Act of 2022)에 따른 세액 공제를 업스트림 소재로 확대하고, 직접 및 간접 생산 소재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를 제공하여 산업계 투자 불확실성 해소 목표
사이버 보안 (11.17)	H.R. 2659 (하) (8.15)	Andrew Ogles (공)	<p>〈국가 배후 위협에 대한 사이버 회복력 강화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rengthening Cyber Resilience Against State-Sponsored Threats Act ▪ 중국 정부 배후 사이버 위협 행위자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정부 태스크포스를 신설하는 법안. 11월 17일 하원 통과 ▪ 국토안보부(DHS) 산하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CISA)은 중국 정부 배후 사이버 위협 평가, 탐지 및 권고 사항을 담은 연례 보고서와 브리핑을 의회에 제출해야 함
반도체 (11.17)	H.R.6058 (하) (11.17)	Bill Huizenga (공)	<p>〈동맹국과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경제·전략 정책 차원에서 대중 의존도 축소를 위해 반도체 공급망을 동맹국(일본, 한국, 대만, EU 등)과 공동 조정하는 법안 ▪ 국내 제조 지원을 넘어 다국적 반도체 공급망 협력에 방점
운송 (11.17)	H.R.6071 (하) (11.17)	Gregory Steube (공)	<p>〈비시민 상업용 운전면허 발급 제한 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용 운전면허(CDL) 발급 대상을 미국 시민, 영주권자, 미국 이민국(USCIS)이 허가한 특정 취업이민자에 한정 ▪ 기존 규정보다 비시민의 CDL 취득 기준을 대폭 강화해, 물류·배송 업계 인력 운용에 영향을 미칠 전망

* 미국 동부 시간 11월 18일 15시 모니터링 기준

현지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The Wall Street Journal	<p>House Passes Bill to Release Epstein Files After Monthslong Fight (하원, 오랜 논쟁 끝에 엡스타인 파일공개법 통과)</p> <p>미 하원은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된 방대한 정부 파일 공개를 의무화 하는 법안을 427:1로 통과.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공화당 클레이 히긴스(루이지애나) 의원이었으며, 상원에서는 법안 통과를 위해 13명 이상의 공화당 의원 지지가 필요한 상황</p>
The Washington Post	<p>Trump administration to announce dismantling of some of Education Dept. (트럼프, 교육부 일부 해체 발표)</p> <p>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시 교육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K-12 보조금 관리 부서, 대학 진학 및 졸업 지원 부서 등 약 6개 오피스가 다른 부처로 이전될 전망.</p>
The New York Times	<p>Texas Governor Declares Muslim Civil Rights Group a 'Terrorist Organization' (텍사스 주지사, 무슬림 인권 단체 '테러 조직'으로 지정)</p> <p>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무슬림 인권 단체인 미국-이슬람 관계 위원회를 테러 단체로 지정. 주지사는 단체가 하마스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밝혔으나 위원회는 연관성 부인</p>
CNN	<p>Soccer superstar Cristiano Ronaldo to visit White House, coinciding with Saudi prince's visit (호날두-트럼프 회담...사우디 왕세자 국빈 방문 중 이뤄져)</p> <p>사우디 왕세자의 국빈 방문 일정과 맞물려,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18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져</p>
USA Today	<p>Trump says potential \$2,000 tariff dividend checks could come mid-2026. (관세 배당금 2천 달러...'26년 중순에 지급될 전망)</p> <p>트럼프 대통령은 기자 간담회에서 중산층을 대상으로 내년 중순쯤 관세 배당금 2천 달러를 지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혀. 전문가는 미국인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은 비효율적 재분배라는 입장을 밝히며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다고 경고해</p>

* 미국 동부 시간 11월 18일 16시 기준

워싱턴 D.C. 무역관 공지사항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5-41	미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및 예산 합의 관련 주요 동향	2025.11월
US25-40	IMF 세계경제전망(WEO) 발표 및 주요 시사점	2025.11월
US25-39	미국 중·대형 트럭 신규 관세 조치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5.10월
US25-38	미 무역전쟁이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25.10월
US25-37	미 특허의약품 관세 정책 추진 및 제약사별 대응 동향	2025.10월
US25-36	미국 정부의 관세 위반 단속 강화 추세와 향후 전망	2025.09월
US25-35	미국 연준 금리 인하 발표 및 하반기 경제 전망 변화	2025.09월
US25-34	'25년 2분기 미 청정에너지 투자 동향과 정책 환경 영향	2025.09월
US25-33	한미 정상회담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5.09월
US25-32	트럼프 관세로 인한 미국 무역 구조 변화 (25년 상반기 수출입 동향)	2025.08월
US25-31	미국의 희토류 공급망 자립 정책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5.08월
US25-30	미 풀리실리콘 232조 조사 관련 의견수렴 주요 내용	2025.08월
US25-29	미 미소기준(De Minimis) 면세 중단 행정명령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5.08월
US25-28	미 정부 『AI 행동계획』 행정명령 발효 - 주요내용 및 현지 반응	2025.08월
US25-27	백악관 에너지산업 정책보고서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5.07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인터뷰번호	제목	바로가기
코인사-23 (2025.8.26.)		
코인사-22 (2025.5.13.)		

문의	이메일	전화
	jwshim@kotra.or.kr	+1) 202-857-7919
	shim.nature@kotra.or.kr	